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17.(월) 13:00	
담당 부서	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공급망 관리 제도화팀	책임자	팀 장	장용희 (044-287-1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석 (daltn20@korea.kr)
			사무관	이용호 (yhlee3380@korea.kr)
			사무관	정보근 (voxal@korea.kr)

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 지휘 본부 및 기금 설치

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법안 발의

-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
 - 공급망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
 -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·기금 마련
 - 공급망 위험의 포착·예방·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부 시스템 구축

-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(이하 ‘공급망 기본법’)이 발의(10.14일 접수, 10.17일 기재위 회부 예정)되었다고 밝혔다.

-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,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을 준비해 왔고, 업계·학계·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- 공급망 위험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, 최근 ①기술 및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퇴보, ②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, ③코로나19 및 러·우 전쟁 등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, 앞으로도 이러한 불안요소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.

- 최근 미국, 일본, 유럽연합 등도 법, 전담 조직 등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대외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
- ‘인도태평양경제협약체(IPEF)’ 출범(‘22.5월)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간 연합도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

□ 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기본법 기능)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,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*를 추구

* 소부장특별법, 자원안보특별법, 해외농업개발법, 해운법 등 개별법의 제·개정시 방향을 제시하고, 개별법의 분야 특성에 따른 산업 관리방안과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내용을 연계

② (추진체계)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인 ‘공급망안정화위원회’를 설치하여 부처별 산재된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

-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, 주력산업뿐 아니라 식량·범용재·물류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
- 소관부처가 분야별 전문성 및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 근거들을 활용하여 경제안보 품목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인정 등 실제 안정화 역할 수행

③ (위험관리) 위험포착 → 위험예방 → 위기대응의 주기별 관리

- (위험포착)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(EWS) 결과를 연계하여 점검하고, 위험 징후시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 운영

- (위험예방) ①국민경제에 필수적인 ‘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’ 지정,
②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‘안정화 선도사업자’로 인정,
③재정·세제 및 ‘공급망안정화기금*’을 통해 민간의 안정화 노력** 지원

*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고, 경제안보 품목 확보, 수입선 다변화,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, 비축확대 등을 위해 대출, 자산매수, 채무보증, 출자 등 수행

- (위기대응) 위기가 발생한 품목을 위기품목으로 지정하고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 안정조치 등을 통해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 가동

□ 금번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로서,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- ①공급망 기본법은 ②이미 제정 완료된 「소부장 특별법」(주요 공급망 전방(前方)을 담당), ③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「자원안보특별법」(자원·원재료 등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)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1. 제정 배경 및 취지

- ① 정부는 국정과제*, 대외경제장관회의(6.7일),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 (6.16일)」,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사전적·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준비 → 금번 제정안 발의

* (국정과제 19번)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강화

- ② 그간에도 요소수 사태(21.11월)를 계기로 「경제안보 핵심품목 TF」 출범을 통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,
-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가동,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관련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,
 -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체계만으로는 국가 공급망 관리상 부분적 한계가 노출

- ❶ (개별적 대응) 부처별 개별산업 경쟁력 강화 중심의 접근 및 임시 구성한 회의체를 통한 정책 조정으로 범정부 역량 결집에 제약
- ❷ (지원수단 부족)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*에 대한 탄력적 지원근거 불충분
* 수입선 다변화,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,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등
- ❸ (위기대응) 위기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·제도화 미비

- ③ 미국, 일본, EU 등도 공급망 관련 법·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 및 대외의존도 감소 대책을 적극 추진 중으로,

- 우리 정부도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

* (미국) 공급망 행정명령, 반도체 지원법, 인플레이 감축법 등

(일본)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관련 기금 신설

(EU) 역내 필수 품목·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'단일시장긴급조치' 도입 추진

- ☞ 국가 공급망 컨트롤타워, 적극적·탄력적 정부지원 근거 및 위기 대응체제 수립 등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

2. 기존 법률과 공급망 기본법 관계

◇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,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

○ **(기본방향)** 관계법률의 제·개정방향 제시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

* 소부장특별법, 자원안보특별법(제정안), 해외농업개발법, 해운법 등 개별법 제·개정시 방향을 제시하고, 개별법의 지원방안에 더해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내용 활용 가능

○ **(목적)**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이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* 공급망 기본법이 타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,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공급망 관리 목적이 타법에 따른 정책에 반영되어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

3. 추진체계

◇ 범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·지원체계를 수립하고, 소관부처는 품목·서비스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제 안정 조치를 추진토록 역할 분담

○ **(기재부)** 공급망 안정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종합적 지원 체계(기본계획 수립, 경제안보 품목 지정·지원,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등) 마련

○ **(소관부처)**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원 등 안정화 조치 시행

< 공급망안정화위원회, 회의체, 위기대책본부 개요 >

- ❶ (공급망안정화위원회) 기본계획·시행계획에 관한 사항, 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, 위기품목의 지정,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·결정
- ❷ (회의체) 기재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위험 징후가 발견된 분야의 관계부처 공동 점검 및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논의
- ❸ (위기대책본부)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경우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위기대책 본부를 운영하되, 범정부 사안으로 확대될 경우 기재부가 대책본부 총괄

4. 위험포착, 위험예방, 위기대응 등 위기 주기 관리의 체계화

- ① **(위험 포착)**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(EWS) 결과를 연계하여 점검하고, 위험 징후시 기재부·관계부처 공동 점검을 통해 조기 안정화 도모
 - 평시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할 품목·서비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, 기재부가 정보공유의 통로 역할 담당
 - 공급망 위험 징후 포착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위험 현황 및 부처별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체 소집
- ② **(위험 예방)** ①경제안보 품목*·서비스** 지정·관리 및 ②기금 신설 등을 통해 평시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

* (경제안보 품목) 국민생활 및 국가 경제의 안정적 운영등을 위해 범부처 관리가 필요한 소수의 핵심물자(예: 원재료·소재·기기, S/W, 식량, 의약품 등)

** (경제안보 서비스) 교란 발생시 경제안보 품목의 생산·유통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류체계 및 서비스 기반시설

- ① 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·사업자단체의 신청
→ 소관부처가 「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」로 인정
→ 인정받은 사업자에게 재정·세제·정보공유 등 지원

< 선도사업자 인정·지원 절차 >

- <1단계, 신청> 경제안보 품목 및 경제안보 서비스 취급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
- <2단계, 인정> 소관부처가 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 시행계획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
- <3단계, 지원>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재정·세제·금융·정보제공 등 지원과 함께 정부와 공급망 협업을 위한 협조의무(정보공유 및 계획준수 등) 부여

- ② 또한, 「공급망안정화기금」을 신설하여 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 확보, 수입대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
 - 수입선 다변화, 국내·외 생산기반 확충, 비축확대, 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의 국산화 등에 지원
 -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며, 관련 사업에 자금 대출, 자산매입, 채무보증, 출자 등의 형식으로 지원

③ **(위기 대응)** 위기 발생시 위키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운영, 긴급 수급안정 조치 실행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 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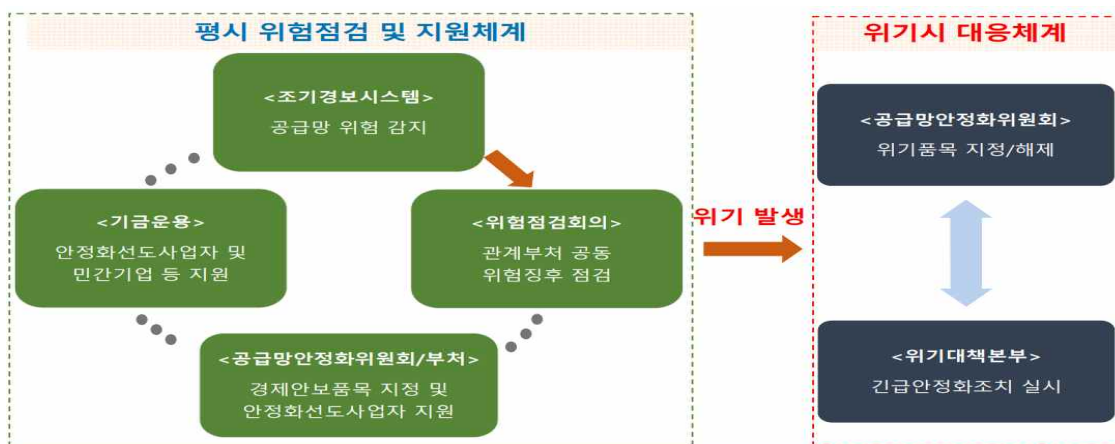
-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 기관의 장 또는 기재부 장관이 위키품목 지정
- 위키품목이 지정되는 경우 위기대책본부* 설치·운영 및 위기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 등 기존의 위기조치들을 제도화**

* 위기가 특정분야 국한시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위기대책본부 운영
→ 단, 범정부 사안으로 확대되는 경우, 기재부가 위기대책본부 총괄·조정

** 수급안정조치, 긴급 정부조달, 위키품목 수입업자 지원, 긴급수급조정 관련 손실지원 등

5.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요 변화

- ① **(범정부 대응체계)** 소관 부처별 개별 대응 및 TF·회의체 등 임시조직 대응체제에서 국가차원의 일관적인 공급망 대응체계 및 역량 확보
- ② **(상시적 위험관리)** 조기경보시스템, 위험점검회의, 위원회 및 기금운용간 유기적 운용으로 위험감지-점검-안정화 및 위기 대응의 관리체계 구축



- ③ **(위기대응)** 그간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교란시 가용한 조치뿐 아니라, 위기 수습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손실 보전 등 위기대응 조치들을 제도화
- ④ **(기금 지원)**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핵심 산업·품목 관련 민간기업이 적시에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(공급망안정화기금) 지원
 - **(협조금융)** 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·상업금융기관과 협력 지원을 추진하여 대규모 사업등에 대한 재원확보 및 지원 실효성 제고

비전

국가안전보장 및 경제안보 확보

목표

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 목표 달성

역할
분담

부처 : 실제 안정화 조치

기재부 : 지원체계 제공

위험
포착

■ [모니터링]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

■ 범정부 EWS 지침 마련
■ 부처별 정보 분석결과 공유
■ 위험징후시 관계부처 협의

위험
예방
(안정화
지원)

■ [계획수립]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
분야별로 세부 연도별 '시행계획' 수립

■ 경제안보 관점의 '기본계획(3년)' 수립

■ [대상지정] 경제안보품목 지정

■ 필요시 부처에 지정 요청

■ [사업신청]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
경제안보품목 안정화 계획을 신청

■ [사업지정] 안정화 사업자 지정

■ [평시지원] 실제 재정 등 지원

■ 부처 재정사업 · 조세감면 수요반영

■ [기금지원] 사업자에게 실제 금융 지원

■ 공급망 기금 재원 및 지원체계 마련

위기
대응

■ [위기인지] 부처가 위기품목으로 지정

■ 부처 미지정시 기재부가 지정

■ [위기대책본부] 1차적으로 부처가 운영

■ 범정부 사안 확대시 기재부 총괄

■ [위기조치] 수급안정조치, 긴급조달 추진

■ 예비비, 긴급수급물자 고시 등 지원

■ [손실지원] 부처가 손실 지원

■ 손실지원 근거 및 체계 마련

컨트
롤
타워

공급망안정화위원회 (대통령 소속, 위원장:기재부장관)

■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조정
■ 기본계획, 위기품목의 지정, 공급망안정화기금 정책 등 심의

범정부 대응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

공급망 안정화 기본법

공급망 관련 개별법률과 유기적 연계

공급망안정화기금

정부 보증채권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 활용

< 품목별 개요 >

분류	품목별 설명 및 관리 목적
위기품목	대내외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 발생, 또는 국내 경제 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이나 피해 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 가 필요한 경우 지정(전체 수입품목 중에서 지정 가능)
조기경보 모니터링 (EWS)품목	대외 수입의존도 가 높아 (50%내외)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출국 수출규제 , 글로벌 수급 동향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4천여개 품목
경제안보 품목	EWS품목 중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의 안정 등을 위해 범부처 관리 가 필요한 소수의 핵심물자·서비스* *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대외의존도,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, 외국 정부 등의 정책 변화, 자연재해·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지정 예정

< 품목간 관계도 >

